

“세월호 참사의 전과 후,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있나?”

류홍변(안산YMCA 사무총장)

1. 세월호 피해 및 대응 현황

1) 세월호 피해 현황

- 전체 피해현황(전체 476명) : 구조 172명, 사망 294명, 실종 10명
- 안산 피해현황(340명 중 263명 사망·실종) : 학생 325명 중 사망 245명(실종 5명),
교사 14명 중 사망 12명. 일반인 사망 1명

2) 안산시 지원대책 현황 : 행정의 1/3인 700여 공무원이 지원활동

- 전 행정이 총 동원되어 아래 표와 같이 30여가지의 지원(세월호 지원단 구성운영)
- 1:1 행정서비스 시행 - 피해가족 1가구당 3인(공무원 2인 + 통장 1인)

제목	내용	담당부서
피해가족 지원서비스	유가족 형제.자매 주말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과
	구호용 정부 양곡공급	생명산업과
	가스, 전기 개선사업 유가족 우선지원	녹색에너지과
	피해자대상 원예치유프로그램	농업기술센터
	피해가족취업지원	일자리정책과
	피해자유가족희망지원	여성가족과
	외국인 피해가정지원	외국인주민센터
	상하수도 요금감면	수도행정과
	식수공급	정수과
	관련버스, 택시이동지원	대중교통과
	사고희생자유품처리지원	청소행정과
	희생자유가족 교육참여시면제지원	여성비전센터
	유가족을 위한 민원행정처리추진	민원여권과
추모	사고 가족대책위원회지원	자치행정과
	정부합동분향소	총무과
정책 및 입법제안	장례지원 및 추모관건립	식품위생과
	사고지원대책기획	공보관
	피해가족지원전담부서설치	총무과
	합동지원법률지원단운영	정책기획과
	특별법 제정관련입법제안추진	정책기획과
	긴급지원제도특례운영	복지정책과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안전총괄과
	정책건의	정책기획과
예산 지원	침몰사고관련예산지원	예산과
	소상공인 보호 운영지급 확대지원	지역경제과
	피해가족 생활안정자금지원	복지정책과
	특별재난지역지방세지원	세정과
치료, 의료	정신건강 트라우마센터운영	단원보건소 / 보건복지부
	구조자 및 유가족등 의료지원	단원보건소

3) 안산 시민단체 및 민간영역 대응

■ 안산지역 민간영역의 지원 및 대응활동

- 세월호 참사 이후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안산지역에서는 15개 내외의 기관과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의료, 복지, 문화, 기록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발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대표적으로는 안산시민단체 중심인 ‘시민대책위’가 가장 왕성한 활동을 전개 중임
: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4.16일)부터 촛불행사 시작하여 6.20일까지 매일 진행(66회).
이후 토요일 집중촛불 및 동네촛불로 전환
: 현재는 가족대책위와 연계해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및 제정운동에 총력 집중
안산시민단체의 경우 지난 3개월 동안 사실상 단체활동을 포기하고 세월호 문제해결에 집중하는 단체가 굉장히 많음
- 세월호 참사 기록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전 과정과 내용을 기록하는 활동 중
: 우리나라 역대 재난의 경우 피해자 및 시민입장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음.
세월호 대응에서 가장 의미를 두는 치유와 회복, 사회적 기억의 수단으로 추진 중임

협의회 및 기관단체명	활동내용
세월호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진상규명 및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 등
단원고 돕기 시민단체협의회	안산 및 진도 현지 자원봉사, 물품 지원
세월호 문제해결을 위한 안산시민대책위 (47개 단체)	촛불 행사, 서명운동 및 특별법제정운동 전개
경기도 안산시 통합 재난 심리지원단 (5.1일 이후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재편)	피해자 및 가족 심리지원
안산시 의약단체협의회	의료지원 활동
경기도·안산시 법률지원단	법률 상담 및 지원
안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가족 위기치료 및 돌봄사업 등 사례관리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 네트워크	유가족 욕구조사, 공동체 회복 사업 준비 중
안산지역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교육훈련, 사랑방 준비
세월호 가족대책위 시민기록위원회	피해자 입장에서 기록 활동 및 자료 수집
안산희망재단	경기도로부터 세월호 모금기관으로 공식 지정
안산문화재단	문화 치유적 프로그램 개발 중
안산 좋은마을만들기지원센터	피해마을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위 외 많은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세월호 참사 대책 및 자원 활동을 전개 중임	

2. 세월호 참사 문제해결 관련 주요 활동

1)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운동

-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 및 사회의 치유를 이루는 시작
- 7월 16일자로 350만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
- 현재 국회에서 농성 중 세월호 참사 100일인 7.24일까지 법안 처리 요청 상태
- 오늘 가족대책위와 범국민대책회의가 1박 2일 도보 진행 중

■ 주요법안내용 및 쟁점

	가족대책위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특별위원회 구성	국회 추천 8명 피해자단체 추천 8명	국회 추천 16명 피해자단체 추천 4명	국회 추천 12명 피해자단체 추천 3명
특별위원회 권한 (수사권, 기소권)	수사권 + 기소권 부여	수사권만 부여 특별검사 요구가능	수사권, 기소권 부여하지 않음 자료제출요청권만 부여
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진실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치유기억 소위원회	진상규명 소위원회 피해자지원 소위원회	없음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기본 2년 + 1년 연장	기본 1년 + 1년 연장	기본 6개월 + 3개월 연장

2) 심리치료사업

■ 정부차원의 대응조직 긴급 구성 및 대응

- 4.16일 재난심리지원팀 구성
- 4.19일 경기도 안산시 통합재난심리지원단 구성
- 5. 1일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재편
 - ⇒ 우리나라 재난사상 처음으로 재난 발생지역에 트라우마센터 설립
 - 재난지역에 대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되고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지역 심리지원체계의 획기적인 변화 예상

■ 주요 대응

- 1단계 : 초기 위기 대응 (4월 17일~ 4월 말)
- 2단계 : 유가족 집중사례관리 및 평가(5월 1일~ 5월 말)
- 3단계 : 회복프로그램 구체화 및 지역역량 강화 구축(6월 1일~ 현재)

■ 활동평가

- 자살 등 초기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적인 상담실시 : 양적 기여도
: 결과적으로 자살과 같은 2차 피해는 최소화되었음.(7.9일 한분 자살)
- 그러나 상담내용과 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
 - 상담의 전문성 부족 - 경험부족, 양적 투입에 따른 상담자의 자질검증 미흡 등
 - 상담의 일관성 부족 - 상담자의 잦은 교체로 내담자의 불만 고조
 - 상담의 통합성 부재 - 심리지원 위주, 건강과 생계에 대한 지원부재
 - 상담관리체계의 분산 - 생존 학생자 치료(고려병원), 생존학생 관리(교육청),
학생 및 가족 치료(트라우마센터)로 분리운영. 통합성 부재
 - 센터의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 - 얼마나 장기적으로 치료해 줄 것인가에 대한
불안 지속

3.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지역적 변화와 고민, 제안

1) 세월호 참사 전과 후 안산 지역사회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 초유의 재난사태로 지역차원에서 <사고 수습 자체>에 전력 집중

- 솔직히 고백컨대 사고 발생 100일이 지났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외에 다른 문제를 깊이 고민하거나 고려할 상황이 아님.
- 아직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음. 오히려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과 흐름을 고려해 판단하면 어떤 변화를 조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것 같음
- 변화의 필요성은 느끼나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이 잘잡히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도 부족함.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봐서는 큰 기대가 없는 듯함

■ 수많은 재난상황, 특히 압도적인 해양재난에서도 국가는 물론 지역 차원의 재난대책과 시스템은 전무. 이것이 한국의 현실인가에 대한 회의

<년도별 대형재난 발생 현황>

	재난발생 건수		사망실종자수		주요 해양사고
	전체	해양	전체	해양	
1960년대	8회	4회	524	321	
1970년대	16회	3회	2,215	886	남영호/해군YTL 침몰/동해어선 조난
1980년대	11회	1회	986	35	극동호 화재
1990년대	20회	2회	1,652	317	서해 웨리호/ 충주호유람선
2000년대 이후	10회	2회	1,167	354	천안함/ 세월호
총 계	65회	12회	6,544	1,913	

<역대 국내 대형 참사 (인명피해순) >

재난사고명	발생년도	피해자수
삼풍백화점 붕괴	1995.06.29	502명
<u>여객선 창경호 침몰</u>	1953.01.09	330명
<u>여객선 남영호 침몰</u>	1970.12.15	323명
<u>여객선 세월호 침몰 (11명 실종)</u>	2014.04.16	293명
<u>여객선 서해훼리호 침몰</u>	1993.10.10	292명
대한항공 보잉 747기 피격	1983.09.01	269명
대한항공 B747-300기 괌 추락	1997.08.06	225명
대구시 지하철 방화	2003.02.18	192명
대연각호텔 화재	1971.12.25	165명
해군 YTL선 전복	1974.02.22	157명
여객선 연호 침몰	1963.01.18	138명
대한항공(KAL) 보잉 707기 공중폭파	1987.11.29	115명
대구 지하철 1호선 도시가스 폭발	1995.04.28	101명
청량리 대왕코너 화재	1974.11.03	88명
이리역 열차폭발	1977.11.11	59명
서울 시민회관 화재	1972.12.02	51명
마포 와우아파트 붕괴	1970.04.08	33명
성수대교 붕괴	1994.10.21	32명

■ 정부의 재난 수습 및 지원에 대한 지역적 우려와 불안감 크다

- 안산시 입장에서는 유가족 지원에 따른 엄청난 비용은 물론 행정력이 투입되고 있음.
- 그러나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나 사고 수습비용이 일부만 지원되거나 장기적이 아닌 단기적으로 지원될 확률이 많음.
- 대구 지하철 참사의 경우 추모공원, 추모시설, 추모재단 등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정부는 국민적 관심이 줄어들면 지원을 줄이거나 끊어버림. 이로 인해 안산시가 모든 수습비용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큼

■ 역시 사회변화의 힘은 당사자에게 있고, 당사자들의 단합에 있다.

- 역대 어느 재난사태에 대한 대응보다도 세월호 참사대응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큼. 그것은 세월호 사건의 후진성도 있지만 가족대책위의 적극적이고 단합된 대응의 결과임.
- 시민단체의 조직적 지원도 매우 큰 역할을 했으나 이는 지원에 불과함.
- 현재 진행중인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의 힘도 결국 가족대책위에서 나오고 있음.

■ 안산 초유로 시민사회운동의 전체의 협력과 헌신이 모아지고 있다.

- 지역 위기 앞에 단체간의 이견이나 불신을 극복하고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음.
- 특히 자기 기관의 특성에 역할에 맞게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문제해결

- 이후 안산시민사회운동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될 것임

2) 지역사회 운동을 오래 해 오신 입장에서 세월호 참사가 던진 운동적인 과제와 고민, 그리고 제안?

■ 여러분은 세월호를 계기로 우리사회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가?

- 바뀌어야 한다는 당위성만 있음. 오히려 최근 흐름을 보면 회의적 시각이 큼.
정치권은 세월호를 정쟁의 대상으로, 언론과 일부 보수세력은 이념대결로
국민은 한편으로 지켜워하는(?) 현상이...세월호를 잊고 싶어하는, 잊기를 강요하는..
- 혹시 우리가 기득권 세력의 프레임에 서서히 갇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정부(정당)의 책임인가? 국민의 책임인가? 진보시민사회 세력의 책임?
- ⇒ 앞만 보고 달려온 100일,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되돌아볼 때는 아닌지?
한편으로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에 대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필요한 시점

■ 이상적 목표와 현실적 목표 사이의 고민

- 세월호를 계기로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전략적 목표, 대응과 희생자 및 피해가족을 중심으로 치유하고 희생자들의 죽음을 사회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실제적인 목표와 운동 사이의 고민
- 대구지하철 참사의 제도적 성과 : 예, 지하철 재질이 방염재에서 불연재로 변경
지하철 안전 매뉴얼 강화 등
- ⇒ 어느 수준에서 목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합의가 부재
: 관피아 문제만이라도 해결하자? 해양안전시스템 근본개혁하자?.....박근혜 퇴진시키자?
특별법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제정되면 우리사회는 바뀔 것인가?

■ 국민, 시민과 함께하는, 가슴 속에 남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호응하는 세월호 운동은 무엇일까

- 진상규명과 특별법에 올인하는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은 소외되고 시민사회단체나 진보세력만 남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아닌가?
- 우리도 모르게 어느 사이 대정부 투쟁이라는 프레임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이것이 우리 운동의 수준인가, 조직적 역량의 한계인가?
- ⇒ 다수의 국민 마음 속에 세월호를 잊지않고 사회변화의 열망으로 승화시키는 운동내용과 방식은 무엇일까? 이 지점이 보완되지 않으면 장기적 운동으로 가기 어려움.

■ 지역에서, 지역시민운동에서의 ‘안전’의 운동적 고민과 수준, 위상은?

- 지역 시민운동에서의 ‘안전’은 2순위, 3순위 운동이었다.

환경, 기후변화, 복지, 지방자치....와 식품안전, 교통안전, 생활안전 비교해볼 때 안전은 비중있는 운동으로 발전시키지 못했음.

- ‘지구위기’에 대한 고민은 있었지만 ‘위험사회’에 대한 자기운동적 이해 부족

⇒ 지역에서부터 위험사회에 대한 전략적 대응 고민 필요

지역운동과 안전(생명), 지역비전과 안전(생명) 등

■ 무엇이 안전이고 생명운동인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 사실 안전한 사회에 대한 상이 무엇인가가 불확실. 자칫 나열식 정책으로 이해

-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책이 아닌 가치와 철학, 문화적 이해부터 출발해야...

- 나아가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시작과 힘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필요

- 깨어있는 시민이 깨어있는 정부를,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다.....

- 독일과 핀란드 등의 사례에서처럼 역사와 과거를 잊지 않고 성찰하는 시민, 깨어 있는 시민, 조직화된 정치시민이 있어야 가능...

⇒ 다시 풀뿌리 운동....